

# 시·도 경제통합 우선 과제는 'SOC·광역교통망 구축'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통합 용역' 필요성·방법론·여론조사 등 담겨 '초광역 연계협력' 중요사업 선정 시도민, 도농간 상생발전 등 기대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1년 간 수행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연구용역에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 협력의 필요성, 방법론, 지역민들의 여론조사 등이 담겼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경제통합과 행정통합 추진 방안 연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법 등이 제안됐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을 위해 △현재의 제도·조직의 틀 안에서 '상생발전협력' 강화·협력사업 추진 △상생 분위기 확산과 공동체 정체성 강화 후 특별자치단체를 포함한 '경제통합' 추진 △한뿌리 공동체로서 시·도민 합의의 형성 후 '행정통합' 추진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광주·전남의 최종 목표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광주·전남 경제통합을 위한 18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성이 높았던 분야는 SOC·교통영역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영역, 문화·관광 영역 순이었다.

연구진은 SOC·교통영역 중에서 제3순환도로 조기 준공, 광주·전남 광역철도

구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 활성화, 전라선 고속철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초광역 연계협력도 중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성도 조언했다.

이는 △상호 이익 극대화 △권역 내 균형 촉진 △범·제도의 효율적 활용 △시·도민의 적극적 참여 등이다.

경제통합과 관련된 시·도민의 인식조사도 담겼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도민 2000명(광주 1000명·전남 1000명)으로, 경제통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시·도민들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선 '공항·광역도로망·광역철도망 등 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25.2%)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산업단지 개발·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20.6%), '의료·복지서비스 분야'(18.8%) 등의 순이었다.

시·도민들은 경제통합을 할 경우 '도시~농촌간 상생발전 강화'(17.4%)와 '인구 소멸·지방소멸 약화'(13.4%) 등을 기대했다.

반면 시·도민들은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두 지역간 정치·경제·문화적 차이에 따른 혼란 발생'(19.1%), '예산·재정의 특정지역 쏠림'(12.5%), '거대도시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12.1%), '지역이 기주의로 인한 시민 간 갈등'(12.0%) 등을 꼽았다.

광주·전남의 경제통합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가 36.4%로 높았다. 이어 '법·제도적 제반 사항이 완벽하게 맞춰진 뒤 추진'(33.7%), '타 지역의 추진 경과를 고려해 추진'(29.9%) 순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 과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관계 당사자, 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줄속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공론과정에서 제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세심한 설계와 진행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행정통합 및 경제통합에 대한 공론화와 별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별도의 공론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 광주시민 79% "개헌 찬성"... 소선거구제 선호

민주 광주시당, 여론조사 '대선 결선투표' 79% 찬성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개헌에 찬성하고,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절반 가까이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와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정치불신 풍조 등이 반영된 듯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개헌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7%로, 찬성이 압도했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찬성 67.2%, 반대 21.4%,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57.1%로, 반대(30.5%)의견 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에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고, 단순 다수제로 인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적

으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46.8%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위한 반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선 34.4%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00석인 총의석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에 달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위한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논의 핵심 중 하나가 의원 정수 확대 문제인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3월 초 중앙당과 정개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김해나 기자



"입춘방 써드립니다"

광주 북구 운암3동 서예교실 강사들이 2일 입춘을 앞두고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입춘방을 써주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전남도의원들 '양곡관리법' 국회통과·촉구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수급과 쌀값 안

정화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관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량과 쌀값 폭락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양곡관리법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고, 농가 소득 보장의 최소한 안전장치가"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Yes &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